

민주당, 9월 전대 검토...당권경쟁 본격화

오늘 최고위원회의서 확정 '단일성 지도체제' 도입 유력 이해찬·송영길 등 후보 거론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일정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17일 "18일 최고위원회의에 대표 선출을 위한 전체 로드맵이 보고되면 전당대회 날짜를 특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애초 8월 하순으로 예상됐던 전당대회를 9월 초·중순으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번 주 중 개략적인 일정을 확정해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이하 전준위)를 구성할 계획이다.

애초엔 2년 임기의 추미애 대표가 2016

년 8월 27일 선출된 만큼 바통을 이을 새 대표 선출도 8월 말에는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수도권에 장소까지 예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에선 당 전체가 지방선거 승리에 매진해온 터라 준비가 부족한 만큼 8월 안에 전당대회를 마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당대회 사전 절차로 조직강화특위를 설치하고, 지역위원회와 사·도당위원회를 개편하기까지 시간이 빠듯하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전당대회는 지금 여건상 8월말에 하기 어렵다"며 "추석(9월24일) 전 주에 하는 것은 어렵지 검토하고 있고, 최후에 대해 그렇게 보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당대회가 9월로 연기되면 추 대표는 그때까지 대표직을 유지하게 된다. 추 대표의 지방선거 다음 날인 14일 ibs 라디오에 출연, '정계개편 얘기가 많이 나올 때는

당 대표가 아닐 것'이라는 사회자의 언급에 "모르죠"라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시간표를 짠 후 곧바로 전준위 구성에 착수한다. 전준위위원장은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중진 의원이 맡는다. 전당대회 개최일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당 지도체제다. 현재로선 최고 득표자가 대표가 되고 차순위 득표자가 최고위원이 되는 '순수 집단지도체제' 대신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선출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도입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는 순수 집단지도체제와 비교해 대표 권한이 더 강력하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이번에 선출되는 당 대표는 오는 2020년 21대 총선 공천권을 쥐기 때문에 더 막강할 수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차 국정운영을 확실히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최고위원이 대표를 견제하는 구

조보다는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구조가 낫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이어 "있는 듯 없는 듯한 '관리형 리더십'이 좋을지, 정권 재창출을 내다보는 '미래형 리더십'이 좋을지는 다소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준위가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택할 경우 그동안 당권에 도전할 것으로 자천타천 거론된 인물들도 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로 진로가 나뉠 전망이다.

대표 후보군으로는 7선의 이해찬 의원, 6선의 이석현 의원, 5선의 이종걸 의원, 4선의 김진표·박영선·설훈·송영길·안민석·최재성 의원, 3선의 우상호·우원식·윤호중·이인영 의원, 재선의 박범계·신경민·전혜철 의원, 초선의 김두관 의원 등이 거론됐다. 4선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3선의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의 출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박지경 기자 jkpark@

“당 수습 먼저”...6월도 빈손 국회되거나 한국당·바른미래당, 원 구성 협상 뒷전

지방선거가 끝났지만 17일 현재 여야가 국회의장단 선출, 상임위원회 배분 등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의 시동조차 걸지 못하고 있다.

여야 모두 지방선거를 끝내고 국회로 복귀했지만, 야권이 지방선거 참패 후폭풍에 휩싸여 원 구성 협상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6월 임시국회가 성과 없이 끝날 것이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부터 원 구성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제1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당장 협상에 나설 상황이 아니다. 한국당의 경우 당의 재건과 혼란 수습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다. 당장은 원 구성 협상까지 신경을 쓸 여력이 없다.

바른미래당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바른미래당은 지도부 총사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등의 혼란 속에 오는 21일 또는 22일 새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다. 그 전에는 협상에 착수하기 어려울 것이라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을 마냥 미룰 수는 없다. 지난달 29일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상임위원회의 임기가 끝나면서 생긴 국회 지도부 공백 사태를 해결하고 상임위 구성도 서둘러야 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원 구성 협상에 들어가더라도 국회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 및 상임위 구성을 놓고 여야 5당의 입장이 제각각이어서 치열한 '살바 싸움'이 펼쳐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재보선 압승으로 원내 1당(130석)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한 기세를 몰아 국회의장 사수는 물론 청와대를 소관기관으로 둔 국회 운영위원장 '탈환'을 노리고 있다.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여당이 국회 운영위원장 자리를 맡아왔다는 게 원내 1당이자 여당인 민주당이 내세우는 논리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에 국회의장 자리를 쉽게 내줄 수 없고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도 사수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국회부의장 2명 가운데 1명은 물론, 의석수에 따라 2곳의 상임위원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평화당과 정의당이 꾸린 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보수 야당이 국회부의장 2명을 모두 가져가면 안 된다며 부의장 자리를 물론 상임위원장 2곳 확보를 목표로 내걸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지방선거 참패 한국당 갈 길 먼 비대위 출범

역대 최대 선거 참패로 존폐 위기에 몰린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식물정당'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17일 당 관계자에 따르면 홍준표 전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일제히 사퇴하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맡았지만 당은 구심점을 잡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지난 15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조기 전당대회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일단 '혁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데 공감했지만, 언제 비대위가 출범할지 알 길이 없다. 당을 어떻게 수습할지를 놓고는 해법만 난무할 뿐이다. 이 때문에 제1야당으로서의 기능은 마비된 모습이다. 이 같은 상태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장 6·15 남북공동선언 18주년이었던 지난 15일 한국당은 공식 논평도 내지 못했다. 당 대변인들이 모두 사퇴했기 때문이다. 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원내지도부가 있지만, 역시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코앞에 닥친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전략을 마련하는 데 난항이 예상된다. 당 살릴 역시 '최소한의 기능 유지'만 해야 하는 현실이다.

당내 곳곳에서 당 수습을 위한 몸부림이 계속되고 있지만 중구난방이다. 일부 초선 의원들은 지난 15일 중진 의원들을 향해 정계 은퇴할 것을 공개 요구했고, 당장 6선의 김무성 의원이 2020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



사과는 그만... 김성태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5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국민에게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며 무릎을 꿇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텐트 치고 '반성 워크숍'

오늘 원내대표 선거일 확정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바른미래당이 김동철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 가동에 시동을 건다.

17일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이날 비대위원장으로 선임된 오신환·채이배·김수민 의원, 이지현 바른정책연구소 부소장은 18일 국립현충원 참배 후 첫 비대위 회의를 개최한다.

비대위원회의 나이는 오신환 의원이 47

세, 채이배 의원 43세, 김수민 의원 32세, 이지현 부소장 42세 등 모두 30~40대다. 비대위를 젊은 정치인들로 꾸려 선거 참패를 딛고 당을 제대로 쇄신·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김동철 비대위'는 오는 8월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전까지 활동한다. 이들의 당면 과제는 당 혁신·쇄신 작업, 당 정체성 확립,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출신들의 화학적 결합 등이다.

이를 위해 바른미래당은 오는 19~20일

이틀간 경기 양평 용문산에서 캠핑 형식의 의원 워크숍을 개최한다.

30명의 의원은 워크숍 기간 야영지 텐트에서 함께 잠을 자고,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는 것으로, 개별 이동도 제한하고 동행하는 당직자들도 최소화한다.

워크숍을 계기로 당의 노선과 정체성에 있어 분명한 결론을 내지 주목된다.

워크숍 이후에는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18일 첫 비대위 회의에서 원내대표 선거일이 확정될 전망이다. 새 원내대표 후보로는 김관영·김성식·이언주 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박지경 기자 jkpark@

문 대통령, 검경 수사권 조정 의지 재확인

검찰총장·경찰청장 등과 오찬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사후적·보충적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문 무일 검찰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문 총장으로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 내의 분위기와 기류 등을 보고 받았으며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문 총장, 이철성 경찰청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 수석 등과 함께 오찬을 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 결정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오찬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제의식의 경우 '왜 국민이 똑같은 내용으로 검경에서 두 번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이다"라며 "추가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것을 다시 확인하려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국민 인권 침해고 엄청난 부담이 되풀이되는 것"이라

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에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을 추진하라고 지시하면서 "자치경찰은 법이 마련돼야 하는 만큼 자치경찰을 언제 실시하느냐의 문제는 국회의 선택을 존중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등 검찰 수사와 관련한 모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검에 '인권옹호부'(가칭)를 신설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나오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다들 미흡하게 여기고 불만이 나올 텐데 구성원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성원들을 잘 설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1일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러시아를 국빈방문에 나서, '포스트 북미정상회담' 조치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의 러시아 국빈방문은 1999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 이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19년 만으로, 취임 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세 번째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나주, 2층 주택, 매매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번지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혁신도시에서 15분, 신북에서 5분
 - 집마당까지 차량진입가능
 - 시세 - ~~약 1000만원~~
 - 개인사정상 급매 - 8200만원
- H. 010-6834-7400

"전체"수리 했습니다

